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발제자 : 이용대 광운대학교 교수
일 시 : 2016년 3월 10일 오전 7시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1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3월 10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이용대 광운대학교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산업으로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방위산업을 보는 관점은 보호 육성론과 경제적 도달 우선론 두 가지다. 보호육성론은 안보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능력을 보장하고, 외국의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국가 재정기여 등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한 논리이다. 경제적 조달 우선론은 산업을 강조한 것으로 방위산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 두 가지 논리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한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핵심이다.

■ 방위산업은 70년대 기본 병기 모방을 시작으로 현재는 150여종의 무기 개발로 자주국방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16조 원을 투자하여 197조 원의 경제효과와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현재 세계 수준의 첨단무기를 독자개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국방과학 기술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동장비가 83%로 우수한 편이고, 항공 우주는 76%로 미흡한 수준이다. 방위산업의 어려운 점은 국내 수요가 상당히 적다는 점이다.

■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10조 원으로 증가 추세이나 영업이익은 감소되고 있다. 방산업체 영업이익률은 2010년까지는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상회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하회하고 있다. 업체 가동률도 국내 제조업보다 20% 포인트 떨어지는 수준으로 현재 58% 내외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방산업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다. 연구개발을 어떻게 증가시킬지가 방산업체 육성의 핵심적인 키(key)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의 2015년 국방 예산은 약 335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이다. 분쟁 및 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율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 아니다.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다. 국방비에서 현실적 증액이 필요하다. 적정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국방개혁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고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 곤란으로 방위산업체의 경영이 악화된다. 방위산업 불확실성으로 강소기업 참여가 저조해지게 되면 방산수출 저조 및 방산업체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 현재의 군사력 조직체계를 보면 ‘군사력’과 ‘건설’이란 두 개의 캡(Cap)이 존재한다. 군사력의 부대계획과 경상운영은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건설인 신무기 개발 등 방위력 개선은 방사청장이 책임을 지는 형태다. 하지만, 군사력과 건설의 이원화는 시너지 효과를 방해한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를 바꿔야한다.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국방관련 우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 시 과도한 소모적인 경쟁을 해소시켜야 한다. 가장 어려운 점인 9~10% 이윤 보장도 되어야 한다.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비리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과감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

■ 방위산업 수출정책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구매국 특징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업체는 업체별로 강점 부분만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 업체와 정부 간 공동 노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국제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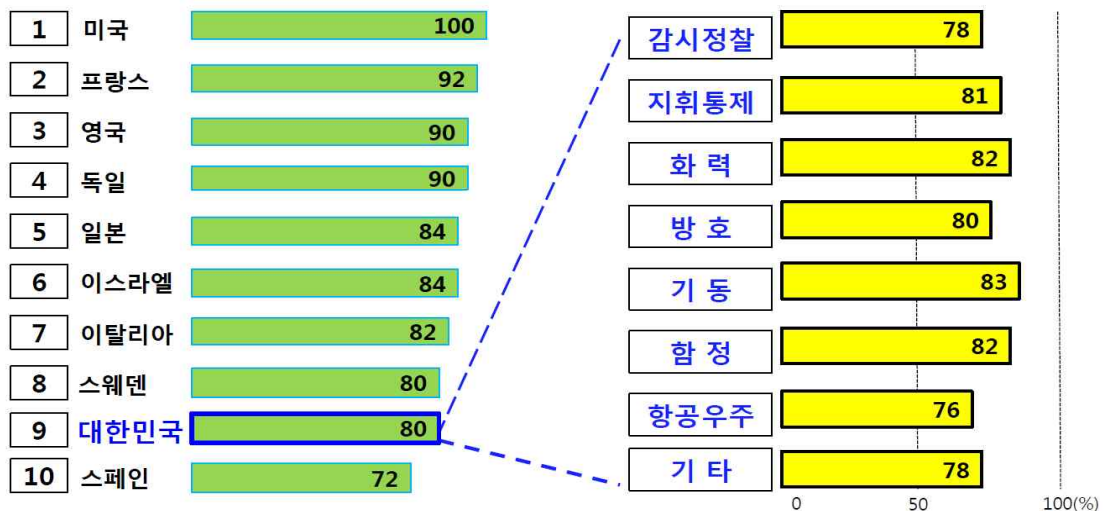
■ 건전한 방위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략무기를 제외한 정보의 과감한 공개 ▲협조적인 방위사업 여건 조성 ▲과도한 경쟁 억제 및 최저낙찰제 문제 해결을 통한 윈윈 전략 수립 ▲무기중개업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형이 아닌 책임성 있는 에이전트(딜러쉽)형의 중개업체 양성 ▲방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산업으로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

: 방위사업 비리를 ‘방산비리’로 혼동, 방위산업에 부정적 영향 미쳐

- 방위산업의 가장 문제가 용어 혼동이다.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법 제 3조에서 [방위산업물자를 제조, 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방위산업과 국외구매사업을 포함하는 방위사업과는 다르다. 따라서 ‘방산비리’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방위사업의 비리, 그 중에서도 국외구매사업의 비리라 해야 맞다. ‘방산비리’라는 잘못된 표현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가 비리의 원흉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방위물자 수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방산업체, 군납업체, 방산관련업체, 무기중계업체 등에서도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된 곳은 95개이고, 방산관련 업체는 6,000~10,000여 개 정도다. 군납업체는 수 만개에 이른다. 요즘 문제가 되는 무기중계업체는 2,000여개다.

-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산업으로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방위산업의 특징은 ▲방산물자는 군과 방산업체의 쌍방독과점 관계 ▲가격보다 품질과 성능이 중요 ▲군 소요량 변동에 따라 유희설비에 대한 고정비 부담 가중 ▲방위가 목적이라 매우 비싼 제품도 목적에 부합되면 구매 ▲원가산정이 어려워 개산 계약 체결 등이 있다.
- 방위산업을 보는 관점은 보호육성론과 경제적 도달 우선론 등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보호육성론은 안보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능력을 보장하고, 외국의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국가 재정기여 등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한 논리이다. 과거 율곡사업 당시 방위세를 부과하면서 방위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경제적 도달 우선론은 산업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방위산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두 가지 논리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한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핵심이다.
- 방위산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율곡사업이 시초로 70년대 기본 병기 모방으로 시작해 현재는 150여종의 무기 개발로 자주국방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16조 원을 투자하여 197조 원의 경제효과와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현재 세계 수준의 첨단무기를 독자개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방과학 기술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권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동장비가 83%로 우수한 편이고, 항공 우주는 76%로 미흡한 수준이다.



[출처: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5, 한국국방연구원 2015.11]

- 방위산업의 어려움은 국내 수요가 상당히 적다는 점이다. 때문에 수출에 역점을 뒤 2006년도에 2.5억 불에서 2015년도에는 34.9억 불의 수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6~2013년 사이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45→84국)했고, 업체 역시 다양화(45→114개)했으며 품목은 첨단화(321→2,532개)됐다.

■ 연구개발비 증액이 방위산업체 육성의 핵심 키(Key)

: 방위산업 지표, 미국 100(1위)일 때 우리나라는 29.9(7위)인 수준

- 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재래식 무기거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또 방위산업 시장의 초과수요를 유발했던 아프간,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면서 무기 거래는 정상화되었고 대신 중고 무기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러한 국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10조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영업이익은 감소되고 있다. 항공유도 및 탄약분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타 분야 매출액은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수준이다. 방산업체 영업이익률은 2010년까지는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상회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하회한다. 업체 가동률도 국내 제조업보다 20% 포인트 떨어지는 수준이다. 현재 58%인 가동률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화력, 탄약, 통신이 평균 이상이지만 함정, 화생방은 낮은 실정이다. 방산업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다. 업체에서의 연구개발을 어떻게 증가시킬지가 방산업체 육성의 핵심적인 키(key)가 될 것이다.
- 종합했을 때 시장규모는 한계가 있고, 방산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수출은 증가했으나 첨단무기 수입으로 무역 적자인 상태다. 최근 5년 무기 수출은 세계 15위지만, 수입은 세계 8위로 예외적인 형태다.
- 방위산업은 민수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 방산업체들이 민수와 방산을 겸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방산부문은 매력이 없다. 순수 방산만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 첨단장비 및 부품에 대한 공급기반이 취약하다. 부품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 향상이 힘들다.
- 글로벌 방위산업지표(잠재·생산·세계·개발·기술역량 등 20개 항목 평가)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우리는 29.9(7위)인 상태다. 방산업체 매출액과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분쟁 · 대치국 中 GDP대비 국방비율 낮아

: 적정 국방 예산 미확보시 자주적 방위역량 국방개혁 수정 불가피

- 국방 예산은 국가 안보를 생산하는 핵심 요소로, 하나의 보험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의 2015년 국방 예산은 약 335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이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 수준의 예산은 얼마인가? 분쟁 및 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율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 아니고,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다. 병사 1인당 국방예산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중국과 비슷한 정도이다. 국방비의 현실적 증액이 필요하다.

분쟁, 대치국 GDP대비 국방비율(2013년 기준, 단위 : %)

국가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	레바논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그루지아	세계평균
비율	2.41	5.98	3.7	4.15	3.08	4.13	2.47	2.29	2.11

√ **한국 : 3.08('92), 2.41('08), 2.54('09), 2.34('10), 2.36('11), 2.39('12), 2.40('14), 2.43('15)**

점유율(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방비/정부재정	14.8	14.2	14.7	15.0	14.8	14.3	14.4
방위개선비/국방비	28.8	30.1	30.8	30.9	30.0	29.5	29.4
국내조달/방위개선비	23.9	77.4	78.8	78.4	80.4	77.6	76.1
국방R&D비/국방비	5.4	5.6	6.1	6.4	7.0	7.1	6.5

√ **점유율 점진적 감소 추세, R&D비/국방비('11년) : 미국 10.7%, 영국 6.2%, 프랑스 8.6%**

병사 1인당 국방예산(2013년 기준, 단위 : 달러)

국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독일	대만	터키
예산	48,413	422,587	206,477	48,093	80,710	85,876	237,634	35,517	20,939

- 적정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주적 방위역량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하다. 또한 정예화 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역시 지연된다. 더불어 방위산업의 연속성 유지 곤란으로 방위산업체의 경영이 악화된다. 방위산업 불확실성으로 강소기업 참여가 저조해지게 되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미흡으로 방산수출 저조 및 방산업체 이탈이 발생한다. 앞으로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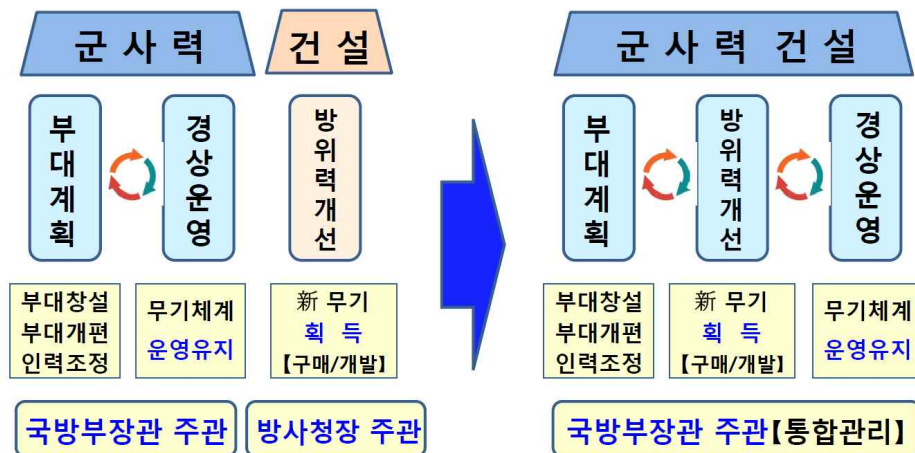
- 80년대 이후 방위산업은 끊임없이 시련이 이어졌다. 80년대는 ADD(국방과학연구소)를 축소, 국외 구매를 선호하여 국방비를 소모성으로 인식했다. 문민정부에 들어선 군 관련 사업을 폄하해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 때문에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있었다. 국민·참여정부에선 방위사업청이 창설되어 민간 전문가들이 군사력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관료를 투입하여 국방비를 삭감의 대상으로 보았다. 현 정부는 방위산업 전체를 비리산업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비리 적발 소요 시간은 평균 2.2년이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보통 10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비리가 왜 발생하는가하는 문제도 짚어 봐야 한다. 국외도입사업에서 무기획득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무기체계의 복잡성에 기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무기중개상의 개입이 되고, 퇴직한 군인이나 공무원을 통해 기밀 수집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개발 및 구매 산업은 원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리 적발 시 미약한 처벌로 인해 지속적인 부정 사례가 발생된다. 군의 폐쇄적 문화와 전관예우 관행도 비리의 원인이 된다. 비리의 유형은 과거 권력형에서 범죄형(개인) 비리로 가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아직 방위

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 국방부장관이 방위력 개선 건설부분까지 맡아 책임성 높아야 : 정부-기업 간 과감한 정보 공유 확대 통해 비리 막아야

- 군사력 조직체계에서 ‘군사력’과 ‘건설’이란 두 개의 캡(Cap)이 있는 상태다. 군사력의 부대계획과 경상운영은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건설인 신무기 개발 등 방위력개선 은 방사청장이 책임을 지는 형태다. 하지만, 군사력과 건설의 이원화는 시너지 효과를 방해한다. 국방부장관이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를 바꿔야한다. 방위사업법과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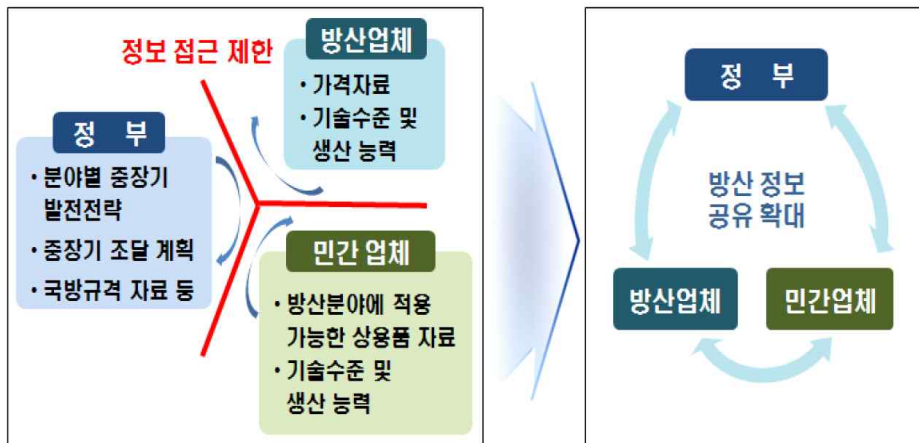


- 안보상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억제 무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FMS 예치금, 과도한 이용 및 불용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회전자금이 도입돼야 한다. 회전자금이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자금을 말한다.

-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수요정책 측면으로 정부와 업체는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소요단계부터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범위를 정해야 한다. 초기단계부터 부품국산화, 정부 지원정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업체에서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해외 수요 창출, 핵심기술을 통해서 방산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정부는 국방관련 우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연구개발 시 과도한 소모적인 경쟁을 해소시켜야 한다. 가장 어려운 점인 9~10% 이윤 보장이 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이 비밀 산업이기 때문에 벽이 형성되어 정부, 기업 등 서로 공유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이것이 비리를 만들어 낸다. 과감하

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 업체도 정부만 보지 말고 업체 자율성을 강화해야한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육성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위산업은 특성상 민수보다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 과도한 경쟁이 개선되어 원-원의 협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 마지막으로 수출정책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수출관련 제도 및 절차의 공정화를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정부 간 판매제도(G2G)를 시행하고 있는데 구매국 특징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업체는 업체별로 강점 부분만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 업체와 정부 간 공동 노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국제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가동률과 이익을 향상시키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방산수출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창조경제의 핵심영역으로 방위산업 육성 필요

: 선진 강국 육성 및 국가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

- 건전한 방위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략무기를 제외한 정보의 과감한 공개 ▲협조적인 방위사업 여건 조성 ▲과도한 경쟁 억제 및 최저낙찰제 문제 해결을 통한 원원 전략 수립 ▲무기중개업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형이 아닌 책임성 있는 에이전트(딜러십)형의 중개업체 양성 ▲방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결론을 내리자면,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산업으로 위상에 맞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방위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을 육성,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선진강국육성 및 국가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창조경제의 핵심영역으로 방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에 대해 지금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12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방위산업도 첨단 신무기 등 신사업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부-기업 간 정보공개 확대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답변 첨단무기에 관련해서는 미래과학부에서 이미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과학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군에서 로봇은 개발된 것을 시험하는 단계로 실제 사용은 어려운 상태다. 군은 전면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에서 로봇의 비중은 적다. 그러나 국지도발에는 로봇이 중요하다. 현재 로봇에 대해서 활성화 되는 상태이며 테러와 경계 쪽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공개는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업체에 물어보면 앞으로의 소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궁금해 하지만, 군은 매번 정책방향이 달라져서 장기적인 전망을 하지 못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에 참여해본 군인이 없기 때문에 야전에서 무기의 성능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요구하는 자의 이상과 만드는 자들의 현실 사이의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도 정보공유에 있어 성능 공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질문2 전관대우도 문제지만 무기 하청업체 선정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 업체가 돈을 벌면 비리를 안 한다. 국내 연구개발에서 이윤이 필요한데 방위산업의 관점에서 경쟁을 붙인다. 최저 낙찰제, 노무문제, 이윤 등을 해결 할 방위산업 특별육성지원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원가 검증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특별육성지원법을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시장은 좁은데 매 단계마다 경쟁을 한

다. 탐색 개발단계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업체가 적정이윤을 보면서 생산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부 역할은 보호 육성을 해서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 너무 경제성만을 생각하며 정부가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무선에서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힘들다.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질문3 정부가 국방도 전자, 자동차 분야 등과 같이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 1등 분야를 육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박정희 정부 이후 울곡사업이라는 방위산업으로 발전이 많이 됐다. 80년대 들어 방위산업을 축소하면서 육성이 미미해졌고,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 업체에 위임하는 형태가 됐다. 또 비리가 여러 차례 있음으로 해서 전체가 왜곡되어 정부가 육성을 못하는 형태가 되었다. 민수와 비교해 매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투자가 없었고 미국의 제약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군의 미래를 보는 혜안이 없었다. 북한은 핵과 화학을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미래를 보는 눈이 부족하다. 현재만을 보는 좁은 시각에 갇혀 있다.

질문4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의 이원화의 수준은 어떠한지? 비교우위가 방위산업에 없는 것인지?

답변 조직의 분리는 예산과 인사권이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무기 수출은 재래식은 가능했으나 첨단 무기는 힘들다. 우리가 과거에 세웠던 방위산업의 국산화가 거꾸로 방위산업의 발전을 막은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있다.

질문5 방위산업 지휘자와 군 지휘관 사이의 갈등이 있는지, 책임 문제는?

답변 공무원은 양재기로 비유돼 찌그러져도 정년이 보장되지만, 군인은 계급정년제나 사고 등의 책임 때문에 옷을 벗게 되는 이유로 글라스(glass)로 비유된다. 글라스는 깨지면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의 어려운 점이 지휘관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방위산업의 가장 어려운 것은 군의 특성과 문화가 반영되지 않는 점이다. 방위산업의 중심에 있는 방산청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 군과 방사청의 지휘관 사이에 문제가 있다.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방위산업에서 가장 등한시 하는 것이 리더십의 부재이며 책임질 자가 필요하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질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